

대학질서 개편 - 지방 국립대 확대 · 강화 (강동호)

1. 한국교육의 결국, 대학서열체제

이 글은 대학서열체제가 우리나라 교육의 치명적 질곡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서열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 교사와 학생·학부모를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왜곡된 교육활동
- 살인적인, 과도한 사교육비
- 더욱 심화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 창의성이 거세된 교육
- 대학경쟁력의 전반적 약화 등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한국교육의 적폐(積弊)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학부모, 교사들에게 전쟁이며 그 결과는 양극화다. 요컨대 한국교육의 인풋은 고통 그 자체이며 아웃풋은 절망 그 자체다. 이는 심지어 한국 사회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창의력과 경쟁력 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치명적 장애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한국형 대학서열체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서열체제는 대체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 서울 내지 수도권 대학 → 지방 국립대 → 지방 유명 사립대 → '지잡대'(지방의 잡스런 대학들)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서열은 대학교육의 질과 성과보다는 주로 고착된 명성과 학생들의 입시성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돼왔다. 그래서 서열체제의 상위권 대학은 언제나 '좋은 대학'이고 하위권 대학은 언제나 '나쁜 대학'으로 기억되고 객관화되는 것이다. 이는 대학 간 경쟁을 가로막는 것으로 귀결된다.

한국의 대학서열체제는 학벌과 지역에 근거한 연고주의, 그리고 지역격차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며, 학벌주의·지역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질서에 대한 학부모와 대중의 의식구조를 통해 입시경쟁제도를 매개로 확인되고 재생산된다(이두휴 2007). 요컨대 대학서열체제는 학벌사회의 반영이자 그 버팀목이고, 지역 및 계층의 불균등구조에 기초하면서 또한 그것을 강화하는 기제라고 볼 수 있다.

대학서열체제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대학서열체제가 현대판 신분제(김동훈 2001 참조)인 학벌사회를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곧 상류신분 획득 경쟁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이보다 몰입도가 높은 경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는 대학서열체제가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극도의 입시경쟁을 조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학부모를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초중등교육의 창의성을 거세하며 더욱이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서열체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미 대학서열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위 서열의 대학이나 하위 서열의 대학 모두에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은 무의미한 것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서열체제가 대학들 간의 경쟁을 제약하고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대학서열체제는 초중등교육을 지독한 비정상적 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정작 대학교육은 정상적 경쟁의 무중지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대학서열체제가 빚어내는 '경쟁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대학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말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참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경쟁력은 세계 최고의 사적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허약하기 그지없다. 그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대학서열체제 문제다. 이 문제는 여태까지의 정책적 경험이 말해주듯, 입시제도의 개편이나 특정 대학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 지원 등에 의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 대학서열체제, 그 자체를 어떻게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한국교육, 그것은 한 발짝도 더 진전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형 대학서열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 대학서열체제 개선에 관한 기존 방안 검토

대학서열체제에 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는 시장경쟁원리를 중심으로 대학질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한 대학평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학질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양자 모두 점점 더 고착돼가는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지만, 문제해결의 접근법이 서로 다른 것이다. 다소 도식적이지만 대학서열체제에 관한 양자의 인식과 해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

| |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경향 | 국가개입을 강조하는 경향 |
|------|--|---|
| 문제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에 따른 대학서열화는 수용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는 고비용 저효율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벌, 지역 등에 따른 서열화 비판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는 대학 간 불평등 심화, 학벌사회 공고화,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 팽창, 중등교육 왜곡 등 초래 |
| 해결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원리에 의한 대학경쟁력 향상 경쟁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대학 자율화와 특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개편 대학 평준화 지향 사립대학의 공영화 대학 자치와 민주적 운영 |

대학서열체제 문제의 보다 직접적인 해결책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와 사립대 간 차이를 중시해 국립대 민영화(내지 독립법인화)나 국립-사립 간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입장(김동준 2001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서열체제 개선의 핵심이 대학사회를 관치로부터 해방시켜 국립대학들과 사립대학들이 동일한 기반 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체제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를 가장 현실적인 개선방향으로 꼽은 것이다. 대학 간의 활발한 경쟁체제가 조성될 때 대학서열체제의 유동화가 이뤄지며 대중의 고정된 서열의식도 약화된다는 논리다.

둘째, 서울과 지방 간 격차 문제를 중시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두휴·고형일 2003 등)을 들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 지방대학 출신자에 대한 우대 조치, 지방대학 지원·육성정책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학서열체제의 유동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학서열체제의 유동성을 전제하지 않은 지방대학 육성책은 정부의 기존 경험이 말해주듯이 별 성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자아낸다고 본다. 때문에 지방대학

육성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할당제나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등의 동반 추진을 강조한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 교육부는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2004/04)을 발표하면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도입, 정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 임용 시 출신대학 편중 완화, 기업체의 학벌·학력 위주 고용관행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셋째, 대학 평준화모델을 지향하면서 모든 국공립대(나아가 다수의 사립대까지도)를 통합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입장(정진상 2004 등)을 들 수 있다. 이른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이다. 이는 프랑스나 독일의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진보정당의 교육정책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안이다(진보정당의 대학서열체제 해소책에 대해서는 후술).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안은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을 통합해 네트워크체제로 만들고, 입학자격시험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을 지원과 추첨에 의해 각 캠퍼스로 배정하며, 다만 서울대는 학부생을 뽑지 않고 통합네트워크 학부생들에게 개방하자는 것이다. 또한 의대, 약대, 법대, 경영대, 사범대 등은 학부를 없애고 전문대학원체제로 운영하자는 안이다.

다른 한편, 대학질서 개편 논의는 초기에 학벌사회의 상징인 '서울대'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쏟아짐으로써 한층 고조되었다. 서울대 폐지론이나 서울대 해체론 같은 급진적 의견은 덮어둔다면, 서울대 민영화론, 서울대 특화론, 서울대 개편론 등은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대 민영화론(김동훈 2001, 98-101)은 서울대를 독립법인화해 서울대가 받는 특혜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서울대 특화론(강내희 2005)은 서울대는 기초학문과 고투자 학문에만 집중하고, 그 외 응용과학 분야는 모두 사립대 등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다. 서울대 개편론은 서울대의 학부를 점차 폐지하고 대학원대학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미 지금 추진 중인 서울대 독립법인화는 대학서열체제를 개선하는 데 별로 주효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대를 독립법인화한다고 해서 대학 간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체제가 이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울대 독립법인화가 이뤄진 조건에서도 서울대 개편론은 여전히 유의미한 방안이다. 서울대를 대학원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은 대학서열체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기존 안들은 자기 나름의 중요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바, 그 문제의식을 종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두휴(2007) 등은 학벌주의와 지역 격차, 계층 간 불균등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돼 부단히 재생산되고 있는 한국의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아, ▲ 학벌 타파와 능력주의 사회 구축(서울대 학부 폐지 및 개편 중시) ▲ 지역주의 및 지역격차의 해소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 사회의식의 변화 ▲ 석차 경쟁식 입시제도의 개편 등 종합적인 해답체계를 제시한다. 필자 역시 이러한 총체적 접근 주장에 일단 동의한다. 다만 큰 틀의 방향제시에만 그치는 것은 어찌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꼴이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 조건과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는 일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본다.

3. 대학구조조정과 지방 국립대 확대·강화

지금 한국의 대학사회는 이른바 '대학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와 혼란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대학당국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참여정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중심으로 대학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현 정부는 '학생정원 감축'과 '경영부실대학의 퇴출'을 중심으로 대학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의 대학 간 통폐합은 '학교법인 간 M&A'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관한 문제의식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주로 국립대 간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그마저도 여러 난관에 부딪쳐 실제로는 그 성과가 미미한 데 그쳤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교과부는 학생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학생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부실대학의 퇴출을 대학구조조정의 귀결점으로 잡고 있다. 이는 급격한 수요 감소에 대비한 공급 조절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정책은 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나 대학서열체제 개선과는 별 상관이 없다. 첫째, 이 정책은 아주 단순화하자면 대학서열체제의 하위권 대학들을 정리함으로써 공급 조절을 피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상위권 대학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교육 전반의 질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둘째, 특히 학생정원 감축이나 퇴출은 주로 지방대학들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지방간 대학서열 격차를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자 하는 각 분야의 모든 정책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정책목표는 법제의 미비와 지방사학의 저항 때문에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개입에 의한 부실대학 퇴출은 잘 정비된 법제와 강력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립대의 역사와 구조를 볼 때 상상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와 혼란을 맞아 어떻게 대처함으로써 대학서열체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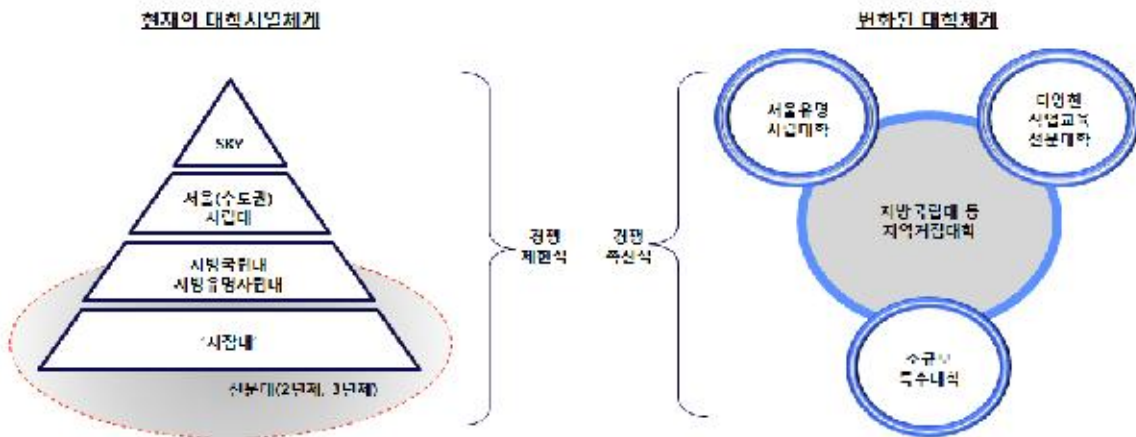
필자는 '지방거점대학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대학 간에 활발한 교육적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대학질서를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본다. 첫째, 부실사학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적 조정에 우선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의 하위권 대학들에 대한 기계적 정원감축이나 폐교보다는 '대학 간 통합'을 통한 정원조정이 보다 합리적이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중에도 교육여건에 부합되지 않게 대형화된 대학들에게는 학생정원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폐교의 경우 정부 개입은 대학 스스로의 폐교 결정을 유도하는 선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며, 보다 바람직한 정부 개입은 대학 간 통합(학교법인 간 M&A)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지방 국립대 - 지방 사립대 간 통합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방 국립대를 확대·강화하고 아울러 거점대학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 사립대를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즉 탁무가내로 경영부실대학들의 퇴출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부실 사립대들을 지방 국립대나 아니면 잠재력 있는 지방 사립대에 통합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요컨대 대학 간 통합을 기본 방법으로 하여 대학 전체의 정원조정, 지방거점대학의 강화·발전, 부실사학의 합리적 정리 등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고질적인 대학서열체제를 완화·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 다수 부실대학들과 수도권의 일부 부실대학들을 지방거점대학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의 질서를 교육여건과 역량이 엇비슷한 서울 상위권 대학들과 지방거점대학들 간의 경쟁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듯 강한 서울 사립대들과 강한 지방거점대학들 간의 경쟁체제를 조성함으로써 지금의 고착된 대학서열체제에 변화를 주고 유동성을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이 대학서열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합당한 길을 여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본다.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대학서열체제를 급진적으로 혁파하는 일은 전혀 용이하지 않다.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거점대학 확대·강화 방안은 성(城)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

다리를 여러 형태로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지금의 대학서열체계 하에서는 성(城)에 올라가기 위해 주어진 ‘좁은 사다리 - 밧줄 - 썩은 밧줄 - 끊어진 밧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취하라는 고통스러운 입시경쟁을 학생·학부모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한 서울 사립대들과 강한 지방거점대학들 간 실질적 경쟁이 일어나는 체계에서는 여러 형태의 많은 사다리들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로지 좁은 사다리 앞에 서기 위한 입시경쟁은 바람이 빠지고, 대신 사다리를 능숙하게 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성(城) 자체를 변화시키고 성벽을 약화시키는 데로 이어지게 되리라 기대한다.

<그림 1 : 대학체계 개편 모형>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방거점대학 확대·강화 모델은 미국의 대학질서(강한 사립대와 강한 주립대)와 비슷하게 서울의 강한 사립대들과 지방의 거점국립대학들이 전체 학생생원의 70~8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살인적인 입시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그런대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더해 각 대학의 자율 전형이나 대입자격시험을 위주로 대입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입시전쟁의 해소,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다양화,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과잉 해소, 지역 간 불균등 완화, 대학교육의 창의력·경쟁력 향상 등 한국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지방거점국립대는 서울의 유명 사립대 못지 않았지만, 현재는 서울 중위권 대학에도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질서 개편의 핵심이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전국 20개 지방거점국립대로 하여금 지역인재 각각 100명씩을 선발해 전액장학금은 물론 졸업 후 본인 희망에 따라 모교 교수 채용, 각종 공무원시험과 공기업·대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사립대보다 열위에 있는 지방 국립대 지원을 강화해 지역인재가 바로 그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지방 국립대가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바란다면 이러한 정책 아이디어가 지방거점대학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의 대학구조개혁안으로 승화되는, 즉 보다 큰 틀의 교육개혁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4. 정당별 대학정책과 대학질서 개편

이제 대학서열체제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각 정당의 대학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결론에 같음하고자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육계정 확대,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적 실현, 무상급식 추진 등 초중등교육정책의 큰 틀에서는 서로 근접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서민 중산층 무상급식 확대"를 내세운다면 민주당은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을 내세우는 것처럼, 개별 정책의 폭과 방식, 속도 등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정책의 중점 사항과 관련해서는 양 정당이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아래 <표2> 참조). 특히 대학질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대입제도 개선, 지방거점대학 강화, 대학교육의 질 보장체계 확립 등을 중점 사항으로 제시하는 데 비해, 민주당은 대학 특성화, 국립대 네트워크체제 구축에 따른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서울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점진적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2 :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고등교육정책사항 단순 열거>

|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 '한나라당 뉴비전' 공청회 자료집(2011/07/20) | 뉴민주당 플랜 : 뉴민주당의 약속 (2010/01/25)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계정을 OECD 평균수준(GDP대비 1%수준)으로 확대 • 대학등록금 부담 30% 인하 • 시간강사제도 전면 폐지, '강의연구교수' 제도로 전환 • OECD 수준의 교육여건(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확보 • 대입제도의 타당성·공정성 제고, 형평성 실현 •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적극 지원(기관 단위로 지역별 지방거점대학을 각각 1개씩 선정해 대규모로 지원, 지방국립대와 지역별 거점대학 등록금은 단계적으로 현재 국립대 등록금 수준보다 50% 이하로 인하)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 보장체제의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등록금 상한제, 무상장학금 확대, 장기 학자금 대출 등을 병행 추진) • 세계 100대 대학의 5개 이상 국내 대학 진입 지원 • 대학 특화 : 연구중심대학 -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 육성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국립대학 간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학위제를 도입, 서울소재 국립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과 함께 학부신입생 선발을 점차 축소) • 50개의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특성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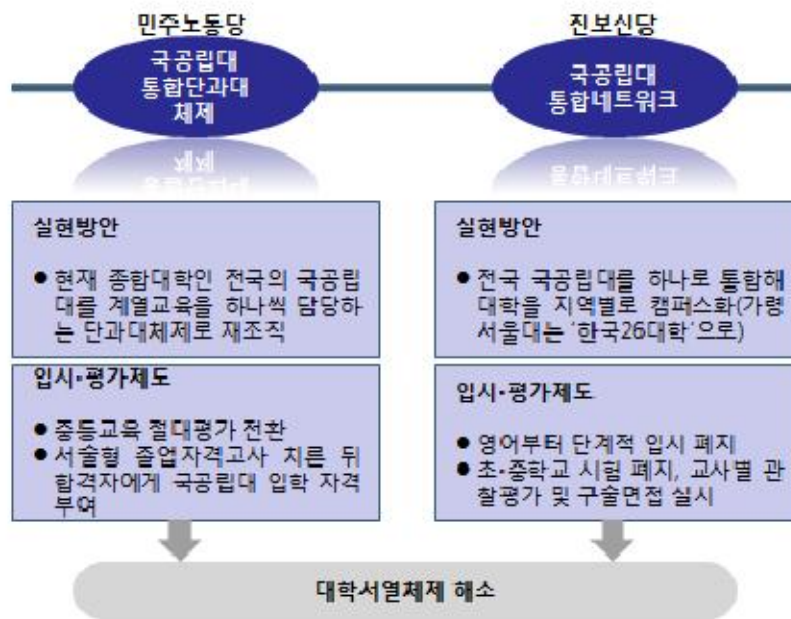
우선, 한나라당의 대학질서 관련 정책은 언뜻 보면 본고의 지방거점대학 확대·강화론과 큰 틀에서 꽤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대입제도 개선책이나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다소 분절적이어서, 대학서열체제 개선을 통한 새로운 대학질서 형성이라는 문제설정 및 그 해답체계 제시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 보장체계 확립이라고 하지만 이는 대 학구조조정을 위한 대학평가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현재 교과부의 구조조정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한 데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대학 간에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체제를 구축해 대학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한나라당의 대학질서 관련 정책은 현상유지책 내지 부분적 보완책에 가깝다고 볼 것이다.

다음, 민주당의 대학질서 개편 방안은 앞서 언급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현실적 적용과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보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뒤따르지 않아, 단순 모방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안을 정책적으로 더욱 가다듬는 노력은 진보정당에 의해 진행됐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의 국공립대를 통합한 네트워크체계 내에서 각 대학은 하나의 종합대학이 아니라 단과대학 역할을 맡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진보신당은 전국의 국공립대를 통합한 네트워크체계 내에서 각 대학은 하나의 캠퍼스로 기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아래 <그림2> 참조). 아울러 진보 양당은 대학서열체제의 기반인 학벌사회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들, 가령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지역균형 인제동용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림2 : 진보정당의 대학서열체제 해체 방안>



이러한 국립대 통합방안은 어떤 식으로든 국립대 클러스터를 형성해 현재의 대학서열체제에 변화의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학계로부터 상당한 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요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나아가 운용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정책적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혁명정권이 들어선다면 모를까,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새겨두는 것이다.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명백하고 급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과 대학서열체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길을 현실지형 속에서 찾아내는 것은 분명 서로 다른 입장이다. 필자는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더할 바 없이 공감하지만, 저

마다 처한 사정이 다른 대학들을 일거에 통합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하위권 대학들에 대한 기계적인 구조조정을 넘어 '대학 간 통합'과 '시장적 조정'의 병행을 통해 지방거점대학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지금의 대학서열체제를 변화시켜 특성화와 교육적 경쟁이 가능한 대학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빠르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참고 문헌>

- 강내희. 2005. "대학의 학문제도 및 교육과정 개혁방향." 『교육비평』 18.
- 김동훈. 2001.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
- 박세일 외. 2002.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 이두휴·고형일. 2003. "대학서열체제의 공고화와 지역간 불균등 발전." 『교육사회학연구』 13(1).
- 이두휴. 2007. "대학서열체제의 구조와 해소방안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7(3).
- 이철호. 2003.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 평준화 방안 모색." 『교육비평』 12.
- 임재홍. 2005. "대학지배구조 개선방향." 『민주법학』 27.
- 정진상. 2004.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 입시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 책세상.
-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2010. 『뉴민주당 플랜 : 뉴민주당의 약속』 (01/25).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 2011. 『'한나라당 뉴비전' 공청회 자료집』 (07/20).